

Section I

연구논문

전문화와 서울대학교의 경제학⁽¹⁾

홍기현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성장의 요인과 그 특성을 전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즉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대학에서 자리 잡고, 경제학자들은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류경제학 중심으로 경제학 교육과 연구가 개편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교육받은 연구자들이 교수로 채용되면서, 경제학 교육은 점차 주류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음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다. 나아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정책적 지향성과 실제 경제운영은 서로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주류경제학이 빠르게 득세하는 과정은 특정한 연구 절차와 방법을 공유하는 분과학문의 특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한다.

주제어: 전문화, 주류경제학, 서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1945년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여 소개하는 글이다. 서울

(1) 이 글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년사에 관한 책을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경제학부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상과대학 시절의 역사를 간략히 추가하고 논의의 초점을 전문화와 연구동향, 특히 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이다. 초고를 읽고 수정할 곳을 지적해주신 정기준 명예교수님,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김봉근 전임 경제학 부장과 직원, 특히 강내영 전행정주임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학생 김승현군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2024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 대학사 포럼에 참여하여 토론을 해주신곽정수선임기자, 류동민교수, 주병기교수, 좋은 의견을 주신 정운찬, 이준구 명예교수, 홍준형회장 등께 감사드린다. 글의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필자에게 있다.

대학교의 경제학을 사례로 하여 전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과학성과 실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제학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경제학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과 과제에 관해서는 강명규(1981), 이기준(1983), 이준구(1989), 김균외(1991), 조순(2005) 등의 선행 연구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100년 이상 걸린 경제성장이 한국에서는 30년 이내에 압축적으로 일어났듯이, 한국에서 경제학계(economics profession)의 성장도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학은 서구의 주류경제학과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Choi(1996)은 한국경제학회 회원록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인맥을 형성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은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Hong(1996)은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의 분야별 구성의 변동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경제학의 전반적인 미국화(Americanization) 경향은 보이지만 구체적인 연구 주제 면에서 경제발전, 경제체제, 국제경제 등 한국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독자성도 함께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학의 성장 과정을 단순히 미국 경제학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학 교육과 연구의 동질화(homogenization)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동질화가 비교적 빠르게 되는 경향이 어떤 한 나라의 정치적·문화적 우위 때문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단면적인 설명이다. 더 주의 깊게 주목할 것은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인데, 경제학계의 형성과 전문가로서의 경제학자의 정체성(identity) 확보 노력이라는 요인이 경제학 자체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1890년대 무렵 대학에서 경제학 분야가 독립적 분야로 교과과정 및 학위가 설치되면서 경제학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는데, 홍기현(2022a)에서 밝혔듯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전문화가 준 영향은 다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신고전파적 주류경제학의 정착하는데 전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전문화가 학문적 경향에 준 영향을 일대일 대응관계로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지성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인 Furner(1975), Ross(1991)가 말하는 소위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 또는 경력주의(careerism)가 문화적으로 주류경제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국지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통 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특정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지키는 연구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학문적 핵심 명제를 축적하려는 과학 공동체의 발달이 주류경제학의 연구 방법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한국의 경우 8.15해방, 6.25전쟁, 4.19학생의거와 5.16군사쿠데타, 그리고 그 이후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학의 역사도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역사만큼 굴곡을 갖고 발달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서구의 경제학을 빠르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학문적 수준의 높이고 연구의 절차를 확립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문화의 경향과 한국 경제 및 정치의 현실적 변화 중에서 어떤 것이 경제학의 특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을 내릴 수는 없고, 양자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일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념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개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학계의 전문화가 교육체제와 신입 교수 채용 등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 현실의 변화보다 전문화로 인한 문화적 변화가 경제학의 특성 형성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경제학 분야에 관한 역사를 전문화의 관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제2절에서는 서울대학교의 學制 변화를 소개하면서 경제학 분야의 교육체제의 변화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경제학과 경영학 등 관련 분야를 함께 가르치던 상과대학 시절, 1975년 이후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경제학과와 무역학과와 병립 시절, 1995년 이후 경제학부로 통합된 이후의 변화 등이 소개된다.

제3절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들이 특정한 정책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성장과 분배라는 대비되는 정책 목표, 그리고 시장주도와 정부주도라는 대비되는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4가지 정책적 이념 유형을 제시한 후, 한국 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뚜렷한 주장을 한 바 있는 몇 명의 연구자의 기여를 이 프레임이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업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의 특성을 정책적 지향의 공통된 특성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전문화에 따른 공통된 연구방법론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이려 한다.

제4절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분야의 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학 방법론 면에서 주류경제학의 연구방법의 공통적 특성이 점차 더 영향을 주게 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념적인 기준에서 교수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졌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연구방법론적인 기준에서 주류경제학 위주로 전공분야의 구성, 연구내용, 교육의 방향 등이 변화되면서 방법론적으로 볼 때 동질화(homogenization)의 경향이 생겼음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전문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5절에서는 전문화가 서울대학교 경제학에 준 영향을 요약하면서, 그 공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2. 서울대학교 學制의 변화와 경제학 교육의 변화

2.1 경제학의 도입과 1975년 이전의 경제학 교육

이기준박사(1983)와 강명규교수(1981)가 설명하듯이, 서구의 경제학과 경제사상은 구한말 시기 중국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개화기에는 일본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이어서 일본 식민지하에서 소개된 경제학은 서구의 고전학과 경제학, 역사학과 경제학, 맑스경제학 등이 있었으며, 이 사조들은 현재 서구의 주류경제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 이전에 개발된 경제학이었다. 이 당시 경제학의 수입이 지체된 것은 서구로부터 직접 경제학을 수입하는 통로가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라는 정치문화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식민지라는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볼 때 시장경제에 관한 이론보다는 역사학이나 사회주의 이념과 같은 것이 더 적합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주류경제학의 도입은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다. 1950년대에는 1945년 해방 이후 혼란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안정적인 교육과 학문 천착이 가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학자들은 한국전쟁기인 1952년에 한국경제학회를 창립하는⁽²⁾ 노력을 했는데, 이는 당시

(2) 한국경제학회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김균외(1991) 참조.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 발간도 1953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경제론집>은 1962년부터 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외에 연세대학교(김학은(2015)참조), 고려대학교(김균·이현창편(2005) 참조)가 경제학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교육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 말하자면 경제학 분야는 사회과학 중 비교적 일찍부터 전문

서울대학교 외에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도 선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46년 개교한 이래 상과대학에서 경제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군정 하에서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면서 경성제국대학 외에 서울에 있던 여러 관립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하게 되는데, 1920년대 설립된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이어받은 경성경제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제3류를 바탕으로 상과대학을 설립하여 경제학과 상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새로운 서구 경제학 이론적 동향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 경제사와 경제사상이 주로 강조되었다. 설립 당시 교수진에는 최호진교수를 제외하고는 맑스경제학자이거나 경제사상 등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한다. 임종철(1990)에 따르면 해방 이후 사상적 분위기와 교수진의 구성으로 인해서 어떤 강의에서는 맑스의 저술을 요약해서 받아쓰는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적 혼란은 한국전쟁을 거쳐서 해소되었고 1950년대 말에는 케인즈경제학을 비롯한 서양의 주류경제학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 케인즈(J.M.Keynes), 한센(A.Hansen), 해로드(R.Harrod)의 거시경제학적 연구와 피구(A.C.Pigou), 사무엘슨(P.A.Samuelson)의 입문적 교과서를 번역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게 되었다.⁽³⁾

상과대학 경제학과와 전공교과목은 다음 <표1>과 같다.

1956년도의 전공교과목을 보면 경제학 과목은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정책을 세 가지 축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영학, 상법, 상학, 회계학을 함께 배워서 졸업 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주류경제학의 핵심 분야의 하나인 미시경제학과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계량경제학은 가르쳐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6년도에는 교과목 숫자가 다소 늘었고 국제금융론과 같은 응용분야와 가격이론과 계량경제학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론, 소득이론, 계량경제학은 선택교과의 하나로 배열되어 있고, 이론, 역사, 정책이라는 종래의 편성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⁴⁾

화가 이루어졌고 여러 대학의 경쟁이 있었으며, 서울대학교가 '선도적' 대학의 하나이지만 독주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당시 번역된 서적에 관한 자세한 목록은 이기준(1983), p.204 참조.

(4) 서울대학교20년사에 소개된 상과대학의 교육에 관한 서술(p.301)에는 경제학과는 “인간이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무역

〈表1〉 전공교과목 일람 (1956, 1966년도)

년도	1956년	1966년
필수 과목	경제원론, 국민소득론, 경제사, 통계학, 화폐금융론, 재정학, 경제정책론, 한국경제사, 무역론, 경제학사, 계획경제, 한국경제론, 경기변동론, 농업경제정책, 경제지리, 경영경제학, 상법, 상학통론, 부기원리, 세계경제, 공업정책, 동양경제, 사회정책	경제원론, 경제사, 경제수학, 통계학, 화폐금융론, 재정학, 경제정책론, 국제무역론, 경제학사, 경제계획론,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 경기변동론, 농업경제정책, 부기원리, 공업정책, 사회정책, 사회과학개론
선택 과목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경제사상사, 재정학사, 경제철학, 인구론	가격이론, 국민소득론,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노동문제, 한국경제사,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각국경제사, 비교경제체제론, 각국경제론, 경제지리, 경영총론, 상법, 경제철학, 인구론, 국제금융론, 독점이론

출처: 이준구(1989), pp.512-513

〈表2〉 상과대학의 직급별 교원 명단 (1966년 기준)

직급	이름
교수	최문환(학장), 이상훈, 민병구, 소진덕, 황병준, 정병휴, 박희범, 오만식, 변형운, 이현재, 오상락 (이상 11명)
부교수	차병권, 홍성유, 이용준, 심병구 (4명)
조교수	김봉오, 강빈구, 강명규, 나용배, 김원수, 김종현, 이병찬, 국정효, 임종철, 김식현 (10명)
전임강사	이정호, 신용하, 안병직, 조병태, 최기원(4명)

출처: 서울대학교20년사

1966년 당시 상과대학의 교수진은 〈표2〉와 같은데, 총29명의 교원 중에 경제학 분야가 가장 많고, 경영학, 상법과 상학, 교양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과는 “무역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며, 경영학과는 경영관리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서술되어 있으며, 상학과는 회계학과 마케팅으로 나누어 교과목을 어느 정도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학과 간 차별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제한된 분야이지만 경제학과 경영학의 융합적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서울대학교 및 상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대폭 줄어서, 상학과가 75명으로, 경제학과가 50명, 무역학과 20명으로 주는 대신 경영학과가 신설되어 45명의 정원을 배정받게 되었고, 1969년에는 상학과가 없어지고 경제학과 55명, 무역학과 40명, 경영학과 100명의 입학 정원을 갖게 된다.

2.2 관악캠퍼스 이전과 경제·무역 양학과 병립 시절의 경제학 교육

1968년부터 추진된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 따라 의학계와 농학계 대학을 제외한 각 단과대학은 1975년 이후 몇 년에 걸쳐서 모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은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는 문리과대학 소속이었던 정치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등과 함께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되고, 경영학은 경영대학에서 따로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상과대학 구성원의 대다수는 상과대학 해체로 간주하여 반대가 있었지만, 종합화 계획은 그대로 확정된다.

1975년의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이루어진 종합화에 따라 종래 상과대학에서 경제학·무역학 분야를 가르치던 교수들 외에도 여러 단과대학에서 경제학 분야를 가르치던 교수들은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과와 무역학과 소속으로 이동하고, 경영학 교수들은 경영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했다.⁵⁾ 양학과는 서로 독립된 학과로서 신입교원의 충원, 예산의 사용, 학생 선발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양학과 교수들은 1961년도에 설립된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세미나 참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1>은 1975년 3월 당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와 무역학과에 발령된 교수 명단이다.

<표3>의 교수 명단을 보면 무역학과에 국제경제학 관련 분야 교수가 있고, 경제학과에는 경제사나 경제사상사 분야 교수가 많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후 1970년대말 1980년대초에 걸쳐서 새로 충원된 교원을 보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충원되면서 점차로 양학과의 분야별 구성은 점차로 비슷해져 간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학과에서 미시경제학 분야의 이승훈교수, 거시경제학 분야의 정운찬교수, 이성휘교수, 무역학과에 채용된 국제경제학 분야의 김신행교수, 이천표교수, 김인준교수, 계량경제학 분야의 표학길교수가 임용되면서 주류경제학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측면이 더 잘 드러난다. <표4>의 양학과 교과과정을 보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을 2학년의 필수 교과목으로 정

(5) 서울대학교 전체를 보면 농과대학에 농업경제학, 보건대학원에 보건경제학, 환경대학원의 환경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원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학문공동체의 전문화 과정을 다루기 위해 개별 교수 간 인적인 상호작용을 가진 현재의 경제학부에 해당되는 교육단위만을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경제학부 외에 다른 교육 단위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부내의 전공 구성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表3〉 1975년 3월 무역학과/경제학과 교수 발령사항

학과	직급	보직	성명	전공분야	비고
무역학과 (9명)	교수		오만식	보험론	
	교수		차병권	재정학	
	부교수	학과장	임종철	경제체제론	
	부교수		박우희	경제성장론	
	조교수		김세원	국제기구론	
	조교수		정기준	계량경제학	이후 경제학과로 이동
	조교수		박재윤	화폐경제학	이후 경제학과로 이동
	조교수		한승수	재정학	이후 경제학과로 이동
	전임강사		김신행	국제경제학	
경제학과 (13명)	교수	무역연구소장	변형운	한국경제론	
	교수	경제연구소장	이현재	재정학	
	교수	학장	조순	거시경제학	
	교수	학과장	김종현	경제사	
	교수		강명규	경제학사	
	교수		정병휴	산업조직론	
	교수		김두희	거시경제학	문리대에서 이동
	교수		임원택	경제사상사	법대에서 이동
	교수		배복석	재정학	법대에서 이동
	조교수		안병직	한국경제사	
	조교수		정영일	농업경제학	
	조교수		최범중	계량경제학	1976년 3월 사직
	전임강사		배무기	노동경제학	

출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 소식지, 1975.5.10.

하고 있다. 아울러 계량경제학, 재정학과 같은 응용 분야를 3학년의 교과목으로 배치한 것도 유사하다, 다만, 경제학과에서는 경제사와 경제사상사, 경제체제론 등의 교과목의 비중이 큰 데 비해서, 무역학과에서는 국제경제학 관련 교과목의 비중이 큰 것이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악캠퍼스 이전 후에는 필수로 부과되는 교과목의 숫자가 점차로 줄어들고, 상법이나 회계학 등은 실제 양학과

〈表4〉 경제학과와 무역학과 학사과정 전공교과목 비교

학과 학년	경제학과	무역학과
2	경제원론*, 경제수학*, 경제사*,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근대경제사	가격이론*, 경제수학* 경제원론, 소득이론* 경제통계학*, 국제경제사
3	재정학, 계량경제학, 노동경제학 화폐금융론, 경제정책론, 한국경제사, 경제사상사 농업경제이론, 국제무역론* 재정정책, 경제학사 수리경제학, 경제계획론 산업연관론, 경제변동론 동양경제사, 각국경제사 화폐금융정책, 농업경제정책	재정학*, 국제무역론*,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경제성장론, 지역경제론 국제경제기구론, 국제수지론* 국제금융론, 국제재정론 자원경제론, 경제통합론 국제경제협력론
4	산업조직론, 조세론 지역·자원 및 환경경제학 경제발전론, 경제체제론 한국경제론, 경제학교전강독 경제분석연습, 근대경제학강독	무역정책, 후진국경제론 국제자본이동론, 국제무역제도론 국제무역론강독, 국제금융론강독 국제경제학연습, 한국무역론 국제경제학교전 I, II, 관세론 기술경제학, 각국경제론, 다국적기업론 국제수지론강독, 국제금융론연습 국제경제학특강

출처: 1981년도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표는 필수

의 강의 교과목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여 법과대학이나 경영대학에서 수강하도록 되었다.⁽⁶⁾ 아울러 무역학과에서 실무적인 과목은 사라지게 된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사건의 하나는 무역학과의 명칭을 국제경제학과로 바꾼 것이다. 즉 1985년 3월 무역학과의 학과 명칭을 “국제경제학과”로 바꾼 취지를 보면, 실무적인 성격의 무역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을 주로 가르치되 개방체

(6) 종합화 이후 학과별 교육 영역이 더 뚜렷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한 캠퍼스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여러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 학문간 칸막이 현상이 더 심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상과대학 시절보다 학생들이 법학, 행정학, 경영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할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고, 복수전공/부전공도 장려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융합적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

제에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경제 관계를 더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경제학과와의 경우에는 경제사 과목을 필수로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주류경제학의 위주의 교육이 더 강한 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교육 체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 방식을 정비했다는 점이다. 종래 정해진 수강 요건이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없이 논문 제출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던 방식(소위 ‘舊制’ 박사)을 없애고 학위 요건을 강화하여 논문제출과 함께 일정한 강의 수강과 논문제출시험 통과를 포함한 학위 제도(소위 ‘新制’ 박사)를 정립한 것이다. 경제학과와 무역학과와의 경우에는 새로 채용된 신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원에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수지론 등을 가르치면서 석박사 과정에서 탄탄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서, 석사과정에서 핵심 교과목의 수강을 하고 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진국 대학의 필수 교과목 수강(course work)와 자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2.3 경제학부 출범과 경제학 교육 (1995년 이후)

1995년 3월에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와의 두 학과가 하나의 교육단위인 경제학부(經濟學部)로 통합되면서 경제학 교육에서도 외형상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양학과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1992년부터 있었다. 양학과의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연구 경향의 동질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차별화되는 점이 거의 없어서 통합을 통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면, 교육도 효과적으로 되고 연구의 집중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감은 젊은 층 교수들 사이에 더 컸지만, 중진 교수들도 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의견 수렴의 분위기 속에서 통합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었다.⁽⁷⁾

양 학과는 〈경제학부기획발전위원회〉(위원장:임종철 교수)를 구성하여 통합 준비를 했으며, 1993년 5월 12일 경제학과·국제경제학과 양과합동교수회의를 통해서 통합의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이 회의에 제출된 “통합추진시안”을 보면 1994년부터 양 학과는 신입생을 공동 모집하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

(7) 이하 통합 과정 및 그 이후 교육 변화에 대한 서술은 홍기현(2024)을 주로 참조했음.

계학 5과목을 공통필수교과목으로, 경제사 계열 과목 4개 중 1개와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 국제무역론, 국제수지론 중 2개를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 교육과 입시를 통합하고, 학사·입시·인사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모든 교수가 1개 위원회에 참여하게 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위원회 배정 방법 등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했으므로, 그 이후 2년여의 논의를 거쳐서 1995년 3월에 경제학부라는 통합 조직이 실현됐다. 행정적 통합 이후 입시와 교과과정이 완전히 통합되고, 경제학부 단위에서 새로 신입 교원이 채용되면서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었다.

경제학부로 통합된 이후 경제학부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선임되었는데, 통합 직후에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김종현교수가 초대 학부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학부장은 적절한 연령대에서 추천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교수회의에서 투표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학 교육의 방향, 신입 교원의 층위 분야, 연구비의 사용 방식, 공간의 사용 등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경제학부 운영 규정> 등 각종 절차적 제도 정비를 통해 의사결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학부로의 통합 직후 학사과정 교과과정은 <표5>와 같다. 1997년의 경우에는 경제학부 단위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1학년부터 경제원론을 가르치고 4학년까지 경제학의 교과목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영학원론, 회계학, 조직행위론 등이 여전히 나열되어 있는 것은 상과대학 때부터 이어온 유산이지만, 경제학부에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해당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단과대학에서만 제공되었다. 또한 보건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은 각각 보건대학원과 환경대학원 소속 교수들이 직접 학사과정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부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되었다.

경제학부 통합 이후 교과과정은 2학년에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을 핵심적 교과목으로 두고, 응용 분야들이 3,4학년에 개설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구미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류경제학의 전형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사나 경제사상사 등의 교과목이 다소 많고 응용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교과목의 담당하는 교수진의 구성과 개별 교수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表5〉 1997학년도 경제학부 학사과정 전공교과목 이수표준형태

학기 학년	I		II	
1	경제원론 I* 현대경제의 이해		경제원론 II* 경제수학*	
2	미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영학원론 국제경제기구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회계학 근대경제사 노동경제학 국제경제론 마르크스경제학	
3	헌법 재정학 계량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한국경제사 노사관계론 농업경제이론 현대자본주의 비판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민법 재정정책 경제학사 수리경제학 국제수지론 경제통합론 동양경제사 서양경제사 각국경제사 산업조직론 산업연관론	
4	상법 무역정책 경제계획론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 경제예측론 기술경제학 한국경제론 환경경제학 보건경제학 경제학교전강독 신흥공업국경제론	경제사연습 계량경제학연습 한국경제사연습 국제금융론연습 공공경제학연습 농업경제학연습 경제성장론연습 경제발전론연습 응용계량경제학연습 국제경제학연습 응용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연습	행정법 경제변동론 경제체제론 일본경제론 중국경제론 재정학연습 경제학사연습 농업경제정책 게임이론 및 응용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미시경제학연습 경제사상사연습 노동경제학연습 화폐금융론연습 한국경제론연습 산업경제학연습 후생경제학연습 산업조직론연습 기술경제학연습 서양경제사연습 마르크스경제학연습

서 이러한 특이성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가 보인다.

경제학부로 통합된 이후 대학원 교육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핵심교과목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경우 사실상 1년에 걸쳐서 배우도록 설계되었고, 전공 분야의 교과목도 많이 개설되어 논문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석사과정만 마치고 유학을 가는 경향도 생기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수한 학사과정 졸업생이 본교의 대학원 진학 또는 연구 부문으로의 진출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서 우수 학생 확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2022년부터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연결하여 교육하는 석박사통합과정으로만 입학하도록 하여 전업적(full-time)으로 학습하고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하도록 시도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좀 더 시간이 경과한 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 논문의 추세에 관한 홍기현(2024)의 조사를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즉 경제사상(B) 분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고, 경제사(N)는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1945년 이후 미국의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구성의 시대별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⁸⁾ 이에 비해 경제발전(O)과 경제체제론(P)은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의 노동 및 인구경제학(J)은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는데, 이는 저임금, 임금 격차 등 전통적 노동경제학 주제 외에도 저출생, 여성 문제 등 새로운 경제문제를 분석하려는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서울대학교에서의 경제학 연구의 이념적 지향

3.1 한국 경제발전과 경제학의 정책적 지향

1945년 이후 경제학계와 경제학의 빠른 성장에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대학의 성장과 함께 경제 자체의 성장에 따른 인력과 지식의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변화가 경제학의 특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약 80년에 걸친 경제발전의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8) Spellman and Gabriel(1978) 참조.

〈表6〉 경제성장 단계별 정치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과제

시기 구분	정치경제적 사건	주요 경제정책 과제
회복기 (1945-1960)	해방(1945), 한국전쟁(1950-1953), 4.19학생 의거(1960)	국가 수립 및 전후 회복, 경제원조의 영향
이륙기 (1961-1979)	5.16군사쿠데타(1961), 10월 유신(1972), 1,2차 석유파동(1973, 1979)	산업구조 전환, 수출 중심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유입
전환기 (1980-1997)	6.29선언(1987), OECD가입(1996), 외환위기(1997)	중화학공업화, 세계화, 노사갈등, 불평등
안정성장기 (1998-현재)	국제금융위기(2008), 코로나 팬데믹(2020)	경제안정, 복지 지출, 저출생

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1945년 한국 경제를 Rostow의 경제성장 단계설을 준용하여 구분하면, 고도성장 이전의 단계(1945-1960), 이륙(take-off) 단계(1961-1979), 공업구조의 고도화로 전환되는 단계(1980-1997), 그 이후 안정 성장 내지는 저성장 단계(1998-현재)라는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해당 단계별 정치경제적 주요 사건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표6〉에 서술하고 있다.

〈표6〉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패턴은 선진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장 다른 것은 변화의 속도이다. 선진국에서 100년에 걸쳐서 나타난 변화가 한 세대에 걸쳐서 나타날 만큼 압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는데, 정책적 지향성(orientation)을 성장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목표와 정부주도와 시장주도라는 두 가지 수단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7〉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A)전통적 주류경제학에서 지향하는 시장 기구를 통한 효율적 경제 운영, (B)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재분배 등을 통해서 평등을 확보하려는 개혁적 자유주의, (C)정부개입 또는 경제계획을 통한 평등

〈表7〉 경제 정책의 이념적 지향성

목표 및 운영방식	분배 중시	효율 및 성장 중시
시장중심	B. 개혁적 자유주의	A. 전통적 주류경제학
정부중심	C. 평등지향적 개입	D. 정부주도 성장주의

지향적 사회주의, (D)정부개입을 통한 고속성장의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부주도 성장주의가 그것이다.

〈표7〉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이 표는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관련자들의 의견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명확한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시장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경제학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경제학자에 대한 Takase와 Kang(1998)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의 긍정적 효과 등 미시경제학적 실증 명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강한 반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적 규범 명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 말하자면 주류경제학자들이 시장주도적 경제운영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총국민생산의 70% 정도를 민간경제가 담당하고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30% 정도는 정부 개입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목표와 운영방식이라는 두 가지 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2차원 평면상에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목표들에 비해서 독립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면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성장과 정부주도가 성장 초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셋째, 현재 제시된 효율 또는 성장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외에 다른 목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당장 성장 추구하고 효율 추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제주체가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경우 어떤 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성장 속도는 그 경제의 가능한 최대성장률보다 낮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성장 추구하고 효율 추구가 평등 추구에 비해서 그 차이가 적다고 보고 편의상 동일한 지향성으로 간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른 중요한 문제로서 대외 개방과 내수 중시라는 의견 대립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인데, 1980년대 이후 수출주도적 성장이 성공하고 나서는 보수적 정치 이념에서는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다보니까 대외 개방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내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추세라고 보아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⁹⁾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개인별로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정부주도를 통한 성장을 지지하는 경향(D)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시장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A)가 커지게 된다. 아울러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강화를 주장(B)하거나 정부가 직접 평등한 방향으로 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자라는 주장(C)이 나타나기도 한다.

3.2 한국 경제의 전반적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들의 정책적 지향성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시기별로 한 적이 없으므로, 전반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연구들에 한정되지만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글들을 보고 개별적인 입장들과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면서 의견 추이를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1970년 11월부터 4년여 동안 상과대학장을 지냈고 상과대학의 해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학현(學峴) 변형운 교수(1927-2022)의 한국경제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자.⁽¹⁰⁾ 변형운교수는 1956년부터 상과대학에서 경제수학과 계량경제학 등을 가르쳐 왔으며, 경제변동론과 경제발전론에 대해서 강의와 연구를 해 온 분이다. 변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분과학문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모토인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이란 구절을 연구자의 자세로 삼고 있었다. 1972년에 발표한 글을 보면 대학 교수의

(9) 1970년대에는 물론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민족경제론, 자립경제론, 종속이론 등이 많이 논의된 바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경제학에서는 그 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보수주의적 정치가들이 내수 위주 경제운영을 주장하는 경우가 선진국에서 생기고 있는데, 경제학이 앵글로색슨의 학문에서 태생된 것이라는 말에 비추어보면 정치이념은 경제이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보수주의자가 대외적 개방을 비판하는 방식의 의견 갈등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변형운교수의 경제학 학습과 연구에 관한 이력은 변형운(2000)에 수록된 자전적 에세이를 보면 된다.

역할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은 현실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현실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제학 교수들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 교수의 직접적인 현실참여를 찬성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경제학 교수가 경제정책상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서 그때그때 학회지에 발표한다든가,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서 발언을 하여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새로운 건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발언에 있어서 경제이론을 망각해 버린다든가, 정부 혹은 산업계의 주장에 안이하게 타협해 버리는 일이 없다.”(변형운, “경제학 교수의 자세”(1972), 변형운(2000), p.221)

1980년 8월 변형운교수는 박정희대통령 사후 전두환 등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세력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사직하도록 강요되었고 1984년 9월 복직될 때까지 야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해직 교수나 해직 언론인과 교류하면서 당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해직을 겪고 난 이후 변교수의 글을 보면 종전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경제자립도 저하 내지 대외의존성 심화, 현저한 독과점화·경제력집중, 소득분배의 불평등심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경제체제에 관련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경제자립도 제고 내지 대외의존성 극복, 독과점화·경제력집중 완화, 소득분배개선의 셋을 묶어 볼 수 있다.”(변형운, “한국 자본주의의 나아갈 길”(1987), 변형운(1987), p.192)

변형운교수는 교수직에서 해직되었을 당시 제자들이나 지인들의 함께 1983년 학현(學峴)연구실을 만들어 교류 활동을 하였으며, 이 연구실은 1993년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된다. 변형운교수와 교류하던 제자들 중 상당수가 김대중대통령(1998-2003), 노무현대통령(2003-2008)으로 이어지는 정부에서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이러한 경제학자들을 “학현학과”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박정희대통령 당시부터 경제발전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학자 집단을 부르는 “서강학과”와 대비하여 부르게 된다.⁽¹¹⁾ 즉 <표7>의 분류에 따르면 서

(11) 문재인대통령(2017-2022)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참여한 학자들도 광범위한 학현학과의 일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변형운교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강대학교 김경환교수(2000)에 따르면 ‘서강학과’는 본래의 의

강학파는 성장을 목표로 정부주도적 경제운영을 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학자들이므로 D의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학현학파는 복지를 추구하면서 적절한 정부개입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로서 C에 가까운 편이라고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변형윤교수 자신은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류경제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21세기의 한국경제는 우선 이 큰 두 줄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균형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기업경영의 내실화, 제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인간중심의 경제의 지향 등이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변형윤, “21세기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1999), 변형윤(2000), p.189)

물론 언론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학현학파는 특정한 연구방법론이나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핵심적 명제를 공유하면서 연구를 발전시키는 본래적 의미의 학파도 아니고, 변형윤교수 개인의 경력이나 생각이 언론에서 말하는 학현학파의 정책적 방향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기준교수(2023)는 변형윤교수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정신적 지원을 한 것을 학파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학현학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정부나 정치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보면 인적 네트워크로서 학현학파로 부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좀 더 평등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입장(C)이 명확히 드러나는 두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는 1963년부터 상과대학 무역학과에서 전임강사로서 강의를 시작한 임종철교수다. 임교수는 경제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의 학파는 아니지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주류경제학적 이론을 현실에 적극 적용하려는 서강대 관련 교수의 인맥으로서 경제학 교육과 현실 참여를 통해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강학파’는 주류경제학적 입장(B)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정부의 정책집행자로 참여한 경우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선택지 중에서 성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관찰된다. 물론 학자 출신 정책가들은 정통 관료나 기업이 출신보다 현격하게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지향했던 것은 분명하다. 학현학파나 서강학파나 모두 언론에 의해서 특정 학교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향을 같이 하는 인물집단으로 간주되어 만들어진 이름으로 본래의 학파는 아니므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정책적 지향상 한 가지 부류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의견 분포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류 사회의 규율로서 원리 원칙의 힘을 믿는다면, 한편으로는 그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식인이 가져야 할 자세다. 그리고 이것은 자세의 문제이지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 경제 사회에는 학문상의 진리, 즉 경제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이나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이 실패하고 그 결과로서 한국 경제가 고통 받는 이유는 원칙과 실천 방안 사이의 괴리에 있다. 괴리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원칙에 대한 신념 부족을 들 수 있다.”(임종철, “경제학도, 그 위상과 과제”(1991), 임종철(1998), p.222)

그런데, 임종철교수가 말하는 경제 원리는 주류경제학의 부분적 이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운영에 관한 체제론적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노동력의 산물이 아닌 토지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토지는 과세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수익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로 징수하여 사실상 공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물론 임종철교수는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나 개인 간 계약의 자유 등을 지지하고 있으나,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나아가 임종철(1990)교수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사회주의 운동이란 명칭과 형태로 구체화된지도 2백 년이 넘었다. 그 동안 내실로나 외양로나 사회주의자에 의한 성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중략)... 한편 시간은 어느 의미에서는 분명 사회주의 운동을 돕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전 인류의 신앙이 될 것이다.”(임종철(1990), p.526)

임종철교수의 이상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면,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은 김수행교수(1942-2015)다. 김교수는 1982년 런던대학교에서 맑스의 공황론에 대한 이론들을 비교하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한신대학교에

(12) 임종철, “토지 사유, 금지돼야”(1991), 임종철(1998), pp.82-83. 토지공유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은 임종철(1990), 제12장 참조.

(13) 임종철(1998), p.156.

서 근무하다가 학내 문제로 1987년 해직된 후, 맑스경제학 분야 전임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김교수는 고도성장기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영국 경제정책의 상대적인 개혁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맑스경제학자가 되었다고 한다.⁽¹⁴⁾ 김수행교수는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류경제학은 분석을 사람, 즉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에게 이리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그 개인들의 합계가 곧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미 분석 대상으로 어떤 사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행동이나 인식 등을 일정하게 규정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시각은 주류경제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개인의 합이 사회가 된다고 보면 이론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같은 개인을 상정해야 된다고요. 남한테 전혀 의존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개인은 역사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개인이에요.”(김수행(2009), p.19)

김수행교수는 맑스경제학을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선구적인 노력을 했으며 맑스의 <자본론>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을 지도하여 배출하였다.⁽¹⁵⁾ 김수행교수는 이 책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서 “우선 복지국가라든지, 사회보장정책을 펴서 국내시장을 넓히는 방향”(p.268)을 제시하며, 경제위기의 대한 적절한 설명 체계와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좌파가 재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학자보다 좀 더 주류경제학에 가까우면서도 정부의 역할, 특히 공공선을 위한 정부 개입이나 경제주체의 도덕적 노력을 강조한 학자로는 조순교수(1928-2022)가 있다.⁽¹⁶⁾ 조순교수는 육군사관학교 교관 복무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4) 김수행교수의 연구 경력과 경제관은 정년퇴임 후 인터뷰인 김수행(2009) 참조.

(15) 우리나라에서 맑스경제학의 도입과 전개에 대해서는 김수행교수(2004) 자신의 서베이를 참조하면 된다. 이 책에서 맑스경제학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투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p.70) 한편 김수행교수가 2008년에 퇴임한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는 정치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경제학 일반 분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 맑스경제학 분야의 강의는 강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더 이상 충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16) 조순교수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는 이지순(2023) 참조. 이 추모사에서 인용된 글을 보고 조순 교수의 정책관을 전반적으로 알리는 글, 조순(2015) 논문을 알게 되었다.

1967년에 버클리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돌아와서 1988년까지 교수로 봉직했다. 조순교수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배운 제1세대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류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고 화폐금융론 등을 강의했으며, 1974년에는 『경제학원론』을 발간하여 우리 나라에서 주류경제학 교육이 뿌리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조순교수는 경제기획원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서울특별시장 등 공직에서도 활동을 하였으며, 원로 지식인으로서 큰 영향을 준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조순교수는 주류경제학의 교육과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평소의 정책관은 인본주의적 전통에 따르고 있어서 도덕과 문화를 중시하고 반지성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소홀히 여겨왔다. 그 결과 한국인은 돈만 아는 반(反)지성적 가치관을 갖게 됐다. 원래 유순하고 인정 많은 국민이 사납고 살벌한 사회를 만들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GDP 수준으로도 분배의 양극화만 없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조순(2015), “성장보다 사람, 한국형 뉴노멀을 만들자”, 신동아, 2015년 10월, 이지순(2023, p.362)에서 재인용)

위의 구절은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John Stuart Mill이 경제성장이 멈추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에 대해서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뒤로 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¹⁷⁾고 하면서 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연상케 한다. 19세기 중반 활동한 Mill은 영국의 대표적인 개혁적 자유주의자로서 그 이후 영국 경제학계를 이끌고 가는 A.Marshall이나 J.M.Keynes와도 사상적으로 비슷한 토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조가 조순교수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조순교수는 경제적 자유만으로서 사회가 잘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유와 평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17) J.S.Mill(1948)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 나오는 말로서 Landreth and Colander(2002), p.173에서 재인용

야 하며, 이 제도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창조와 파괴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회에 무익한 공부를 하는데 알뜰한 청춘을 낭비하는 무정한 교육 시스템은 다 방기해야 한다. 앞으로 좋은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실업이 일소 되기를 바란다. 경제의 기반은 중소기업, 내수산업의 <창업>이다. 이 기반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이 현상이 극에 달하면, 소득 1% 경제, 및 1% 정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조순(2015), p.79)

조순교수는 위와 같은 정책관을 갖고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발전, 소득분배 양극화의 개선, 교육의 쇄신과 정치의 개혁을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조순교수와 맥을 같이 하는 정책적 지향은 정운찬교수(2017)에게서도 나타난다. 2010년 국무총리를 마치고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정운찬교수는 대기업중심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소득양극화를 막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격심한 경쟁체제가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경쟁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보상을 받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남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식의 경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투쟁이다. 모든 국민들이 살벌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면 그 사회는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회다. 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자랄 수 없고 혁신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창의보다는 반칙이, 혁신보다는 편법이 훨씬 더 유용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이다.”(정운찬(2020), p.11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무역학과에서 활동하던 몇 교수들의 경제운영의 전반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살펴본 결과 전문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하나는 여기 소개된 교수들과 소개되지 않은 교수들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구체적인 의견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 간 의견 차이를 알 수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한 가지 차이가 발견된다. 즉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발언을 한 교수들은 주류경제학이 추구하는 시장주도적 운영

에 관한 효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한 교수들의 입장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류경제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주류경제학자들과의 의견 차이 정도도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좀 더 평등지향적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은 교수들의 경제정책관은 주류경제학이나 당시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상 이러한 차이는 실제적인 의견 차이일 수도 있으나, 학문적으로 입증되어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대학 사회의 분위기와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정책관이 소개된 교수들의 개인적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무역 양학과 및 경제학부의 교육과정의 추세는 꾸준히 주류경제학 위주로 개편되었고 신입 교원의 채용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세 분야로 더 집중되는 경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찰과 결부해서 보면 경제학 분야의 교수들의 대다수는 점점 더 주류경제학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류경제학 자체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현실적합성이 높아져서 만족스러운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학문발전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3.3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에 관한 논의들

지금까지 소개한 논의들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운영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의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게 된 핵심적 원인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영국 고전학과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소득

(18) 류동민교수의 의견대로 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경제 부서 관료들도 유학 등을 통해서 주류경제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의 영향력은 학계 외에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라는 한정된 범위의 동향을 분석했으므로, 상대적인 입장이 관료에 비해서는 더 시장지향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을 창출했으며 차입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시도를 했으나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인해서 대기업 위주의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출지향적 성장이 어떻게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경제학의 발전과정을 보면 이론이 현실 변화를 뒤쫓아서 설명하는 인지적 시차 또는 문화적 지체가 있는 것이 다반사였으므로,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낸 경제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가 왜 성공했는지 잘 모르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²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왜 성공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공 요인이 20세기말 이후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 체계들은 1980년대 이후 제시되었다. 즉 동아시아경제의 빠른 성장에 관한 설명은 시카고학파의 Lucas(1988) 등이 제시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Lucas(1993)는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의 원인을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한 경험이 생산 현장에서 쌓이면서 생산성이 향상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부족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외환부족으로 인해서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과 함께 경제개혁프로그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차입을 많이 하고 있던 상당수 기업들이 청산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화가 깨지는 충격을 받게 된다. 일찍이 Krugman(1994)은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을 ‘기적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요인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풍부한 노동력에 더하여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19) 박희범(1970) 참조.

(20)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상주의 시대에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에도 알려져 있던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로 쓰이는 금속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키고 실물경제 크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중상주의에서 추구한 정척수단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중상주의 딜레마(the Mercantilist dilemma)라고 부른다. 물론 Keynes가 재평가했듯이 중상주의 정책은 국민경제를 형성시키고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서 유효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중상주의 당시에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는 없는 상태에서 왕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정책으로서 추구된 것이었다.

결과이지,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1990년대말 소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 요인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Krugman의 해석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과연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이 단순히 투입요소의 증가를 통한 성장이며 결국 생산성은 정체되는 전통적 경제성장의 경로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빠른 성장 과정 속에서 총생산성의 증가가 실현되고 있었던 것인지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표학길등(2005) 연구자들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의 총산출회계를 추계하고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측정했는데, 이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59%였지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까지 한국 경제는 요소주도적 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생산성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후속 작업으로서 표학길등(2015)은 매년 생산성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1996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을 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94%로서 증가율은 낮아지지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19%로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자본의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200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정보통신자본의 산출기여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그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송병락교수(1997)은 Michael Porter(1990)의 국가경쟁력 모형 등을 참고로 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도적 요인으로서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정책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리더십과 수출확대정책, 자원 면에서 인적자본 형성과 물적 자본 투입, 환경적 요인으로서 유교문화권,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근교수(2007)는 기술혁신을 자본주의 발전의 요체로 본 Schumpeter의 기술경제학에서 착안하여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서 기술면에서의 추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후발국의 경우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단순히 추격을 빠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미시경제학 전공자인 이승훈교수(2024)는 권위주의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포함한 경제발전에 유리했던 이유를 구조전환에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일관된 지원책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이 둔화된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세직교수(2020)는 1990년 중반 이후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이 매 5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씩 하락하는 추세가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국제경제학 분야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한 김인준교수(2013)는, 최근에는 이영섭교수와 의 공저(2023)을 통해서 저성장, 부채급등, 소득불평등이라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 현실 설명을 목표로 하는 실사구시 학문인 경제학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경제발전에 관한 위와 같은 연구들은 현실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들이 모두 경제학부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적 주제들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내생적 성장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주류경제학의 주요한 논의로 흡수되는 한편, 제도론적인 설명은 그러하지 않았다. 즉 대체로 주류경제학의 개체주의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에 의거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잘 수용되나, 전체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체계는 덜 수용된다고 보인다.

4.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성과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연구

4.1 과학방법론과 주류경제학의 특성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이란 현실에 부합하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일반적 설명체계라고 규정된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맞고 경제학도 과학을 지향한다면 경제현상을 현실과 부합되게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제들은 모두 경제학의 범위에 넣어서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실제 경제학 교육에 있어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좀 더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간주하며, 그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을 먼저 잘 배워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분과학문에서 특정한 과학방법론을 추구하는 경향은 경제학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과과학이 그러하듯이 경제학에서도 특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연구하는 방식을 더 중시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연구를 권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과학사 연구자 Imre Lakatos에 따르면, 실제 과학의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실증주의과학관에서 예측한 것과는 달리 비실증적 요소와 실증적 요소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즉 과학이란 과학자 공동체가 핵심적으로 공유하면서 잘 변화하지 않는 중핵(hard core)과 핵심적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되며 기각가능한 보호대(protective belt)로 구성된 연구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송현호(1992)에 따르면 현재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과 경제학 연구프로그램은 (1)개별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핵심 명제, 따라서 (2-1)경제 현상을 가급적 개인의 최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라는 적극적 연구지침(positive heuristic), 그리고 (2-2)개인의 최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현상을 제도나 문화의 차이로만 설명하지 마라는 소극적 연구지침(negative heuristic)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전통적인 과학방법론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방법론적으로 개별주의적(methodologically individualistic)이고 연역적(deductive)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개별 경제주체라는 단위를 관찰의 출발점으로 가지면서, 개별 경제주의의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려는 절차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경제학의 여러 조류를 비교해보면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유사하게 방법론적으로 개별주의적이면서도 좀 더 귀납적(inductive) 관찰을 중시하는 경향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the Austrian economics),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취하면서 연역적 설명을 시도하는 맑스경제학,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입각하면서도 귀납적 방법을 통해 경제 제도를 설명하려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경제학이 있다. 홍기현(2010, 2022)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학문적 조류들은 1870년대 경 서로 경쟁적인 조류들로 존재했으나, 1930년대 이후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학계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조류들은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었다. <표8-1>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경쟁적인 조류들에 대해서 방법론적 특성의 위치를 비교한 표이다.

물론 경제학은 전반적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연역적이고 개별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내에서도 각 분과학문마

<표8-1> 과학방법론적 기준으로 비교한 경제학의 조류들

분류	좀 더 귀납적	좀 더 연역주의적
좀 더 개별주의적	오스트리아경제학	신고전학과 경제학
좀 더 전체주의적	제도주의경제학	맑스주의경제학

〈表8-2〉 분야별 방법론적 특성 비교

분류	좀 더 귀납적	좀 더 연역주의적
좀 더 개별주의적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
좀 더 전체주의적	경제체제론	거시경제학

다 방법론적 특성은 달라서, 예를 들면 심리학은 개별주의적이며 귀납적인데 비해서 사회학은 전체적이며 귀납적인 이론이 더 많은 편이다. 경제학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방법론적 특성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경제학의 전문 분야별로는 다음 〈표8-2〉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물론 어떤 학파의 이론체계를 단순히 통상적 과학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특징짓기는 힘들지만, 〈표8-1〉과 같은 관찰 방법은 어떤 학파에 속하는 연구자 간에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에 따르면 특정한 학파의 이론체계는 점점 더 핵심적 명제를 공유하면서 관찰 방법도 특정한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어떤 설명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경우에도 주류경제학의 경우 연역적으로 도출된 명제를 검증하는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의 전략이 채택되고, 통계학적 자료를 모아서 귀납적으로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되지 않게 된다.

4.2 전문화와 서울대학교에서의 경제학 연구 동향

1946년 서울대학교의 개교 이래,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의 연구 추세는 한 마디로 주류경제학이 점차 소개되고 교육과정과 연구 경향도 주류경제학 위주로 개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수입되는 속도도 빨라졌으며, 나아가 이제는 세계 경제학계와 시차 없이 이론이 개발되고 우수한 연구 업적도 세계 유수의 경제학 전문지에 발간되는 일이 많아졌다. QS 학문 분야별 평가에 있어서도 서울대학교 경제학 분야는 꾸준히 세계 4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학 분야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각국의 대학교의 숫자가 인문사회계열 학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염두에 두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의 서울대학교 경제학의 발전 과정은 물론 주류경제학계에 편입되기 위한 직선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

결책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수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이 합쳐진 결과이다. 이 과정을 단순히 Choi(1996)와 같이 ‘미국화’(Americanization)라고 부르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만을 보는 관찰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순 교수 이래 서울대학교 경제학 분야의 교수들이 대부분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로 충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주제나 정책적 지향 면에서 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며, 한국에 적합한 연구주제와 정책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굳이 지난 50년의 변화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난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²¹⁾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은 각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자 공동체로서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과정으로서 학과의 설립, 전문 학회의 창설, 전문지의 발간과 전문지를 통한 소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경제학과들도 마찬가지로 학과 설립, 학회 창설, 전문지 발간 등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 연구자로서 경제학자(economist)로서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전문화 과정에서 대학 사회(academia)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자 전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은 ‘발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publish or perish)라는 학문 평가 기준이다. 즉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는 전문지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경우 채용과 승진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지만, 반대로 전문지를 통한 평가가 없는 경우 불리하게 되는 평가 기준이다. 그런데, 전문지에서의 동료 평가는 대체로 학계에서 공통되게 시행되는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공통된 절차와 방법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혹독한 평가를 받게

(21) 지성사에서 말하는 전문화는 분업에 의한 특화(specialization)과는 분석의 초점을 달리 한다. 즉 전문화는 경제성장론이나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듯이, 분업에 의한 지식 축적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특화가 유리하다는 사실과 관련은 되지만, 전문가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화와 달리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Becker & Murphy(1992)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는 달리 작업 간 조정비용과 정보 전달의 곤란성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대로 분업이 진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학문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경우 특화가 덜 진전된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요인은 Becker가 말하는 것과 서로 다르다. 홍기현(2022b)에서 지적하듯이 전문화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칸막이(disciplinary silo) 현상과 더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이러한 학문 평가 기준의 확립은 대학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교수의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연고가 주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연구업적 평가 시 학술지의 등급을 고려하도록 하거나 소속 대학 이외의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대학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 학계의 공통된 평가 기준이 거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학계 내부의 평가 기준이나 관행이 굳어지는 경향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든 국지적 논제(local issue)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의를 기피하는 성향이 생긴다. 즉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을 추구하는 학문의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한 이익(particular interest)을 위한 당파적 주장을 배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파적 주장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보편적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지성사를 연구한 Furner(1975)와 Ross(1991)은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 또는 경력주의(careerism)이라고 부른다.

전문화의 경향이 경제학의 발전에 준 영향은 각국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점차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전파되는데 유리한 환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법칙을 중시하는 과학주의(scientism)의 등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학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각종 전문지를 통해서 보급되고, 개인의 최적화 문제를 경제 문제에 적용하려는 방법이 많이 쓰이면서 공통된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세계 학계의 표준적 이론체계로 자리 잡게 된 상황에서 경제학을 직접 도입하였으므로,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주류경제학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특정한 경향의 경제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문화적 요인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이 지배적이 되는 밑바탕에는 대학의 제도화와 전문화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우선 주목할 것은 교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제도의 변화이다. 1975년 이전 상과대학 시절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 체제에서 직급별로 교수의 정원이 있어서, 어떤 한 교수가 퇴직해야만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했다. 아울러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중진 이상 교수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다. 1975년 종합화 이후에는 학교 전체적으로 공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채용 계획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 경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점차로 경쟁을 통해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된다. 물론 1980년대까지는 본교 출신자로서 사전에 교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채용하는 제한적 경쟁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1999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학사과정 기준으로 동일한 학과 출신이 아닌 사람을 3분의 1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면서, 적어도 3회 중 1회 이상은 완전한 공개채용이 되었고 나아가 외국인 교원 채용도 생기면서 경쟁적 방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1990년대 이후 원로 교수들이 퇴직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자를 충원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당시 시점에서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많은 분야를 선발하거나 아니면 미래 추세를 보아 가장 필요한 분야를 선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학부로 통합된 이후에는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7인의 인사기획위원회에서 유력한 연구자의 분포, 교육적 필요, 경제학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분야를 교수회의에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빈번하게 “경제학일반”이란 표현의 모집 공고를 통해서 가장 역량 있는 교원을 선발하거나 이미 역량이 알려진 외국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들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는 형식을 통해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교수 승진에 있어서도 학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양적 기준인 연간 1편 꼴의 논문 수 외에 경제학부에서 독자적으로 질적인 기준을 추가했다. 이 기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경제학 전문지를 (1)경제학 전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전문지 5종, (2)경제학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전문지 수십 종, 그리고 (3)사회과학분야 인용도(SSCI) 기준이나 연구재단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지들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전체가 일정한 점수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1), (2)그룹에 속하는 전문지에 논문을 발간한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 또는 정년보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논문을 발간한 경우 그에 맞는 정도의 금액을 포상함으로써 연구에 정진하도록 장려하였다. 그 결과 점차로 새로 좋은 교수가 채용되거나, 채용된 이후에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제학 교수들의 연구 수월성이 높아지는 한편 연구 동향에 있어서 주류경제학 위주로 개편되는 경향이 발생한 것은 이와 같은 교수 채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表9〉 경제학 교수진의 전공 분야별 분포 비교

분야	1975년	1990년	2024년
A. 일반경제학	0	0	0
B. 경제사상	2	3	0
C. 수리·계량경제	2	2	4
D. 미시경제학	0	3	6
E. 거시 및 화폐	4	3	9
F. 국제경제학	2	5	3
G. 재무경제학	0	0	2
H. 재정학	3	1	2
I. 보건, 교육, 복지	0	0	0
J. 노동 및 인구	1	1	3
K. 법경제학	0	0	1
L. 산업조직	1	0	1
M. 경영학	0	0	0
N. 경제사	2	3	3
O. 경제발전 및 기술	2	3	1
P. 경제체제론	1	1	1
Q. 농업 및 자원	1	1	0
R. 도시 및 지역	0	0	1
Z. 기타	1	0	1
계	22	26	38

출처: 2024년 8월 기준, 경제학부 홈페이지 참조

보인다. 〈표9〉는 교수들의 연구 전공분야를 Journal of Economics Literature Code에 따라 분류하여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제학부에서 근무한 이후 퇴직한 교수들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경제학의 세부 전공 분야 중에서 경제사상 분야 및 농업 및 자원경제학 전공 교수는 없어졌으며, 국제경제학, 재정학, 경제발전론 분야도 그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의 분야별 분포를 5년간 씩 나누어 조

〈表10〉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분야별 분포

분야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1~15	'16~20	'21~23	합계
A											0
B	1 (33.3%)		5 (25.0%)	5 (7.9%)	4 (10.5%)	4 (13.8%)	1 (2.2%)				20
C					3 (7.9%)	2 (6.9%)					5
D		1 (14.3%)					1 (2.2%)	1 (2.4%)	2 (3.4%)	1 (2.4%)	6
E				5 (7.9%)	3 (7.9%)		5 (10.9%)	4 (9.5%)	10 (17.2%)	9 (21.4%)	36
F				7 (11.1%)	1 (2.6%)			3 (7.1%)	5 (8.6%)	1 (2.4%)	17
G				3 (4.8%)	3 (7.9%)	5 (17.2%)	6 (13.0%)	7 (16.7%)	5 (8.6%)	4 (9.5%)	33
H			2 (10.0%)	1 (1.6%)	1 (2.6%)		2 (4.3%)	1 (2.4%)	2 (3.4%)	3 (7.1%)	12
I				1 (1.6%)				1 (2.4%)	6 (10.3%)	5 (11.9%)	13
J	1 (33.3%)	1 (14.3%)	3 (15.0%)	11 (17.5%)	3 (7.9%)	6 (20.7%)	2 (4.3%)	4 (9.5%)	7 (12.1%)	6 (14.3%)	44
K					1 (2.6%)			1 (2.4%)			2
L	1 (33.3%)		1 (5.0%)	11 (17.5%)	3 (7.9%)	4 (13.8%)	11 (23.9%)	6 (14.3%)	2 (3.4%)	3 (7.1%)	42
M											0
N		5 (71.4%)	6 (30.0%)	5 (7.9%)	5 (13.2%)		2 (4.3%)	2 (4.8%)			25
O			2 (10.0%)	6 (9.5%)	5 (13.2%)	2 (6.9%)	12 (26.1%)	6 (14.3%)	6 (10.3%)	4 (9.5%)	43
P			1 (5.0%)	3 (4.8%)	2 (5.3%)	3 (10.3%)	3 (6.5%)	4 (9.5%)	5 (8.6%)	3 (7.1%)	24
Q				4 (6.3%)	3 (7.9%)	1 (3.4%)			3 (5.2%)		11
R				1 (1.6%)	1 (2.6%)	1 (3.4%)		1 (2.4%)	1 (1.7%)	1 (2.4%)	6
Y						1 (3.4%)	1 (2.2%)	1 (2.4%)	4 (6.9%)	2 (4.8%)	9
Z											0
계	3	7	20	63	38	29	46	42	58	42	348

사한 <표10>을 보면 교수의 구성 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즉 경제사상(B) 분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고 경제사(N)는 그 비중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산업조직론(L)을 포함한 미시경제학(D) 분야나 화폐금융론을 포함한 거시경제학(E)의 비중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Spellman & Gabriel(1978)이 1900년대 이후 미국 대학교에서 수여한 박사학위 논문의 구성의 추세를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런데, <표9>와 <표10>을 비교해보면 교수의 비율에 비해서 경제발전론(O)와 경제체제론(P), 노동 및 인구(J)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교수의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관심사가 좀 더 한국적 문제 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려는 동기, 자료의 확보의 용이성, 학위 취득 후 직장인 연구소로의 진로를 생각한 결과 논문의 주제가 한국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선택된 것이다.

5. 맺음말: 전문화의 원인과 결과

1946년 서울대학교가 개교한 이래 경제학 분야의 발전 과정을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압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1950년대까지 일본을 통해서 도입하거나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형태로 서구의 경제학을 소개하다가, 1960년대 이후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미국, 영국 등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직접 배운 후 귀국하여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점점 이론 도입의 시차(lag)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이론 수준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으며, 상당수의 교수들은 세계적인 업적을 발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대학의 제도화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갖추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 형성 과정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와 관련된다. 즉 대학 및 학계에서 경제학이란 분과학문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도록 경제학 연구자들이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전문화의 징표들은 뚜렷이 나타난다. 학교의 개교와 함께 경제학 분야의 독립적인 학과가 있었고 전문 학회 활동과 전문지 발간을 통해서 연구자간 교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의 교류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 유학

을 통해서 선진 학문을 직접 배우고 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문 발전을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변형운교수 등이 계량경제학, 경제수학 등을 교육하고 있던 데 더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조순교수가 임용되면서 경제학의 교육과정은 더욱 탄탄하게 되었다. 1974년 발간된 조순교수의 경제학입문서 『경제학원론』은 경제학 교육의 표준적 내용을 제시하여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교과과정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까지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을 함께 제공하던 상과대학의 교육체계가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을 중심적인 필수 교과목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의 교육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5년에는 경제학과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던 무역학과가 1985년 국제경제학과로 학과의 이름을 바꾸었고, 교수들의 연구 분야도 거의 동일한 양학과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1995년에는 경제학부로 통합하게 되면서 주류경제학을 기본 틀로 하는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제공되고 있다.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와의 통합과정은 교과과정, 학생선발, 예산사용, 교원선발 등 모든 영역에서 통합하는 완전한 화학적 결합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도 전문화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1975년 이후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강의 수강을 한 후 논문제출시험에 합격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이 강화된 후, 경제학과와 무역학과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경제학 등이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제공되었고, 해당 분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아울러 논문 제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구절차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적이 학회지에 기고될 수 있는 정도의 논문들도 상당수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과정의 정비와 함께 연구동향도 점차 주류경제학 위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연구동향의 변화는 역시 인적 구성의 변화에서 생긴 것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도 신입교원 충원 방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퇴직하는 교수가 담당하던 전공분야를 그대로 선발하는 관행이 없어지고 당시 시점에서 필요한 분야 또는 잠재적으로 역량 있는 후보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최근의 연

구 실적 위주로 한 것이다.

첫 번째 변화는 1980년대까지 퇴직하는 교수들의 의사를 존중하던 관행이 없어지고 1990년대 이후, 특히 경제학부로 통합된 이후에는 인사기획위원회라는 소위원회에서 채용 분야를 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변화는 결국 전문화의 영향으로 ‘발간하는가 도태되는가’(publish or perish)라는 기준이 도입되면서 생긴 것인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문지에서는 주로 주류경제학의 연구 업적을 발간하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이 아니거나 연구자가 적은 군소 분야의 전문지 논문, 제도나 상황에 관한 연구보고서, 좀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 책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경향이 발생했으며, 한국 경제의 현상에 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한 연구자들의 업적도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교수 채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교수의 전공 분야 구성은 점차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위주로 개편되었다. 물론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세부 연구주제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사상, 정치경제학, 자원경제학 등의 전공 교수가 사라지면서 전공 분야 구성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수 채용 관행의 변화와 함께 승진이나 보상을 위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도 전문지 위주로 바뀌었는데, 경제학 잡지들을 영향력을 기준으로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후 두 번째 등급 이상의 논문에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이 되도록 하면서 신입 교수들은 전문지에 논문을 발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교수들의 연구 동향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었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 동기나 미래 진로와 관련해서 한국적인 주제도 상당 부분 차지하여 경제발전, 경제체제, 노동 및 인구 문제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전문화의 결과 일정한 연구 절차와 방법의 동질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미국 경제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에서 미국의 주류경제학이 동질화의 표준이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미국화’(Americaniza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에서 훈련받은 연구자들의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화의 과정이 한국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문가로서 경제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전문화 노력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지, 지식인 사회에서 외국에서 지배적인 문화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미국화라고 하더라도 미국식 경제학으로의 전문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문화의 결과 문화적으로 전문가적 보수주의 또는 경력주의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례들을 관찰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 잠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전문가적 보수주의 문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영향력 있는 상당수의 원로교수들이 한국경제의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평등이나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현재 교육과정이나 연구동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즉 국지적으로 이해관계 면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4.19학생의거,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학문자유 탄압 등의 사회적 격변에 의해서 일부 교수가 강제적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직 또는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심정적으로는 학문 자유를 기원했겠지만 학과 단위 또는 전공별 학회 단위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민주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서 성명문등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제학 교수들의 참여는 지극히 적었다. 특히 수십 명 이내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경제학 교수는 아주 적었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교수들의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²²⁾

전문화는 근대 학문의 큰 추세로서 한국의 경제학계와 서울대학교도 전문화 추세를 겪게 되는데, 전문화의 요인인 대학의 제도화, 교수채용과 평가 방식의 변화가 외형적으로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빨리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또 다시 특정한 방향이 전문화가 촉진되는 경향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전문화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 80년간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80년의 역사를 전문화란 틀로 설명할 경우 전문화의 장단점은

(22) 물론 일부 학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1980년대까지는 교수협의회나 민주화 교수단체 등이 시국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그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었다. (서울대학교 교수 민주화운동사(1997) 참조.) 한편 경제학 교수들이 행정부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경제부처와 위원회 장관급 직책, 입법부의 국회의원,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는데, 정년퇴임 전 사직한 경우 빠른 세대교체를 가져온 효과는 있었겠지만 특별히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 방향을 바꾼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일반적인 전문화의 장단점과 같다. 즉 전문화를 통해 학문공동체의 일정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전문가적 정체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심 범위나 연구 방법의 상대적인 제한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연구의 수용이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 분야에서 성숙한 전문화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02-880-6380

E-mail: hongk@snu.ac.kr

참고문헌

- 강명규(1981): “한국 경제학사의 비판적 성찰”, 『경제론집』, **20(4)**, 397-450.
- 김균 · 이현창 편(2005):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균, 홍기현, 홍훈(1991):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한국경제학회.
- 김경환(2000): “‘서강학과’가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미친 영향”, 『시장경제연구』, **29**, **1**, 253-267.
- 김세직(2020): “‘5년 1% 하락 법칙’ 깨야 한국 경제가 산다”, 한경Plus, 2020.2.13, 한국경제.
- 김수행(2004):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도입과 전개과정』, 서울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24,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9):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시대의 창.
- 김인준(2013): 『위기극복 경제학』, 울곡출판사.
- 김인준 · 이영섭(2023):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울곡출판사.
- 김학은(201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I』, 한국의 근대경제학 1915-1956.
- 박명규(2024): “지성사로 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0년사 원고.
- 박희범(1970): 『한국경제 성장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변형운(1987): 『한 구조론자의 변: 우리 경제와 자유로운 비판』, 유평출판사.
- _____ (2000): 『경제를 되새기며』, 여강출판사.
- 송병락(1997): 『한국경제론』, 제3판, 박영사.
- 송현호(1992): 『경제학방법론』, 비봉출판사.
-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1976): 『서울대학교 30년사:1946-1976』,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50년사발간위원회(1997): 『서울대학교 교수민주화운동 5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근(2007): 『동아시아와 기술추격의 경제학: 신슈페터주의적 접근』, 박영사.
- 이기준(1983): 『교육 한국경제학발달사』, 일조각.
- 이승훈(2024): “‘한강의 기적’과 반민주적 장기 집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례세

미나 발표 자료.

이지순(2023): “소천 조순 선생님 영전에 올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9**, 359-65.

이준구(1989): “한국 경제학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논집』, **28(2)**, 509-540.

임종철(1990): 『한국경제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총서 7,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1998):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 민음사.

정기준(2023): “학현 변형운 선생님 추모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9**, 366-73.

정운찬외 7인(2017):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 율곡출판사.

정운찬외(2020):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 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동반성장연구소.

조순(2005): “한국의 경제학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사회과학편, 대한민국학술원, 『이 세대의 희망과 현실(II), 조순문집 2002-2010』, 비봉출판사, 2010, pp.299-328

_____ (2015): “자본주의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운영의 원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4(1)**, 209-92.

표학길, 이근희, 하근찬(2005): “한국경제의 산업별 성장 요인 분석과 생산성 추계: 1984-2002”, 『한국경제의 분석』, **11(1)**, 109-160.

표학길, 전현배, 이근희(2015):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홍기현(1989): “미국의 경제학교육과 연구”,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8(4)**, 393-421.

홍기현(2005): “한국에서의 경제학 발전과 과제”. 김균·이헌창편,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_____ (2010): “1890-1930년대 경제학계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9(3)**, 139-164.

_____ (2022a): “경제학의 전문화와 한계혁명”, 『경제논집』, **62(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3-43.

_____ (2022b): “학과중심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교육』 218호, 대학교육협의회, 74-80.

_____ (2024): “경제성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 발전 5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 50년사 원고.

- Becker, Gary S. and Kevin M. Murphy(1992): “The Division of Labor, Coordination Costs, and Knowled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4)**, 1137-1160.
- Choi, Y.Back(1996): The Americanization of Economics in Korea. in A.W.Coats ed., *The Post-1945 Internalization of Economics*, 97-122.
- Furner, Mary O.(1975): *Advocacy and Objectivity: A Crisi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Social Science, 1865-1905*,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 Hong, Keehyun(1996): “The Growth and Change of Economic Research in South Korea”, in W.J.Samuels ed., *Research in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nd Methodology*, 193-215.
- Krugman, Paul(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73(6)**, 62-78.
- Landreth, Harry and David C. Colander(2002): *History of Economic Thought*,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Lucas, Robert(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_____ (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61(2)**, 252-272.
- Porter, Machael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 Ross, Dorothy(1991),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llman W.E. and D.B. Gabriel(1978): “Graduate Students in Economics, 1940-1974”, *American Economic Review*, **68(1)**, 182-187.
- Takase, M. and M.Kang(1998): “An Empirical Inquiry of Economists Consensus or Dissension: The Case of Seven Pacific-Rim Nations”, *Seoul Journal of Economics*, **11(1)**, 1-14.

Abstract

Professionalization and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eehyun Hong

This paper explains the 80 year history of economics education and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the process of professionalization. As economists made efforts to establish economics as the independent discipline at academia, education system and research agenda became more neoclassical-oriented. Specially as many researchers received Ph.D.'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late 1960s, the speed of synchronization with mainstream neoclassical economics became faster, although the developmental policy conducted by government was not congruent with neoclassical orientation. The professionalization based on the specific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explains the fast adoption of mainstream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professionalization, mainstream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